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27(월) ~ 2022.7.01(금)

제공일시 2022 07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27(월) ~ 2022.7.01(금)

제공일시 2022 07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독, G7에 ‘화석연료 감축 계획’ 수정하자고 제안할 듯”

-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독일이 26~28일 자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한 제안서 초안에 ‘현재 에너지 위기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가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함
- 이 초안을 두고 독일과 다른 G7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안서 초안 내용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첨예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 ‘기후변화 공동 대처’라는 대의를 깨고 상황 논리에 따라 이미 국가 간 합의된 내용을 철회하자는 주장인데다, 에너지 조달 구조가 서로 다른 G7 국가들끼리도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임

(연합뉴스, 2022.06.26) 안희 기자  
<https://www.yonhap.co.kr/news/2022/06/26/2022062614000519p01115m>

### 2. 더 강화된 EU의 탄소장벽, CBAM... “韓 기업에 상당 파급”

- 지난 22일 EU의회가 최종 승인한 'EU CBAM 법안'과 'EU ETS(배출권거래제) 개정안'을 통해 본격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2024년 12월말로 설정함
-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CBAM 법안을 통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 5개 분야를 CBAM 적용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5개 분야에 더해 △유기화학 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 또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배출도 '간접배출'로 탄소배출량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확정했음.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시점도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해 2032년에는 무상할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함

(머니투데이, 2022.06.27) 황국상 기자  
<https://www.et.co.kr/etnews.php?no=202206270605485712>

### 3. 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 獨선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 FT “석탄발전소 가동에 러 핑계 그만...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내야”

- 영국은 2011년부터 시행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함. 약 5000만원 이하 전기차 구매시 최대 240만 원을 주던 보조금을 없애고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버스전용도로 주행,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대폭 줄임
- 현재 전기차 판매율은 65%로 세계 최고지만 독일 재무장관의 2035년 EU 내연기관차 폐지반대 등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반대 가능성도 커졌음
- 이러한 조치는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배터리 원료값 인상, 배터리 소재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함

(조선일보, 2022.06.27) 류정 기자  
<https://www.chosun.com/article/news/europe/202206270605485712>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6.27(월) ~ 2022.7.01(금)

제공일시 2022 07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美 대법원의 EPA 권한 박탈과 다음 타깃 지명된 SEC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판결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하여 결정됨. 대법원은 광범위한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함
- 로버츠 대법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해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는 있으나, 의회가 EPA에 이와 같은 규제 계획을 스스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그는 “이와 같은 중대하고 중요한 결정은 의회나 의회가 권한을 명확히 위임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임
-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EPA가 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기에 더 어려워졌을 뿐, 권한을 모두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
- 마이클 제라드 콜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산하 사빈 기후변화법률센터장은 “이는 아주 제한적인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EPA가 자동차(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공장,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배출량 제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EPA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판결이 “미국을 후퇴시키려는 법원의 또 다른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 보호와 기후변화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미 대법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 제한 판결 이후, SEC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도 잠재적인 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미국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로비 단체, 베타 마켓츠의 데니스 켈러 CEO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모든 규제 기관에 적용되며, SEC를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많은 조처가 이른 시일 내에 미국 경제계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정재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도 관찰되고 있음.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SEC 기후공시 규정을 꼽음. 투미 의원은 “SEC가 의회가 승인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모든 기후변화 공시체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함. 미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도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SEC의 공시 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직 SEC 변호사들은 이 판결은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대담하게 법정 공방을 시작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봄
- 로펌 모지스앤드싱어의 하워드 피셔 변호사는 “SEC는 이전에도 기관의 기후 부문에 대한 권한을 문제 삼는 사법적 회의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곧 금융위기라는 SEC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임팩트는, 2022.07.01.) 송준호 기자  
<http://www.impactsonline.com/2022/07/01/0404>